

# 인플레이션 위기는 끝났는가?

## - 고물가 시대에 생계비 위기에 대한 정책대안 -

### 초록

이 페이퍼는 물가상승 동향과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서민과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을 다룬다. 물가상승률이 다소 진정된 상황에서도 필수 소비재인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향후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은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문제와 연관되어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소득 인상, 물가 통제, 공공적 완충재고 도입, 재생에너지 전환 등이 필요하다



### 류승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rufri@hanmail.com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http://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전화: 02-2670-9224
- 팩스: 02-2670-9299
- 메일: [kctuli2020@gmail.com](mailto:kctuli2020@gmail.com)

민주노동연구원의 발간물은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차

■ 요약 .....	3
1. 서론: 인플레이션 위기는 끝났는가? .....	5
2. 고물가 시대의 현황 .....	7
1)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가? .....	7
2) 물가상승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	9
3. 향후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들 .....	12
1) 전기 및 난방 요금의 인상 .....	12
2) 농산물 가격과 기후위기 .....	13
4. 결론 : 정책 대안 모색 .....	16

## 요약

이 페이퍼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그 동안의 물가 동향과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계에 미치는 부담을 논의한다. 또한 향후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을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 ■ 인플레이션 위기는 끝났는가?

-2023년 들어 OECD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은 진정되고 있으며, 국내 물가상승률도 2022년 5.1%에서 2024년 상반기 2.9%로 하락했다. 세계적으로 실질임금 또한 회복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 특히,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 ■ 202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지만, 2020년 12월 이후의 누적 상승률은 14%에 달하며, 체감 물가는 더욱 높다.

-전기, 가스, 수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저소득 가구는 연료비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매우 높아, 물가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저소득층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 향후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정부의 규제 아래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향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추가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과 기후위기가 지속될 경우 난방 및 전기 요금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이 저하되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내는 수입 농산물 의존도가 높아,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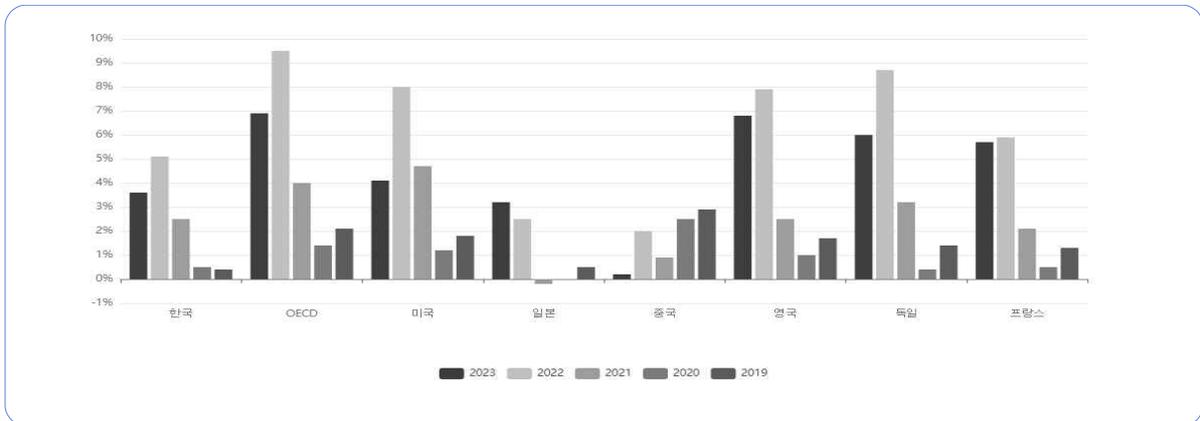
■ **인플레이션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된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소비재에 대한 가격 관리와 수급량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농산물과 에너지와 같은 필수 재화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완충재고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국내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수입 농산물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농업 생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을 벗어나, 국가 책임하에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민영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공공적으로 재편해야 하며,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 1. 서론: 인플레이션 위기는 끝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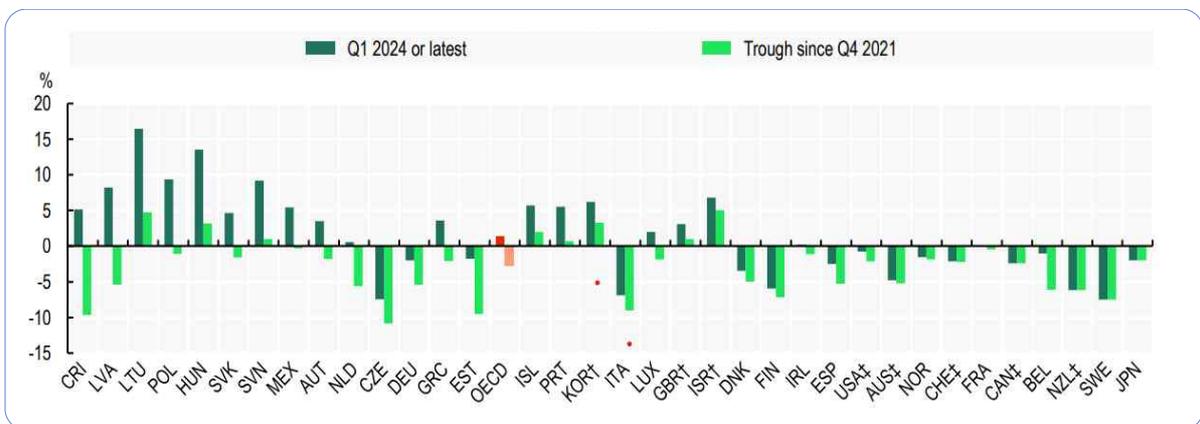
2023년을 거치면서 2022년에 매우 심각했던 물가상승률의 폭등은 진정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OECD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2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에 5.1%(연간)에서 23년 3.6%로 하락했다. 24년에 들어와서도 상반기(1-5월)에는 2.9%였다.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2022년 3.6%에서 24년 상반기에는 2.4%까지 하락하여, 물가목표인 2%에 근접하고 있다.

[그림 1] 국내외 소비자 물가상승률



- 자료 : 통계청

[그림 2] OECD 국가들의 실질임금 누적증가율



- 자료 : OECD(2024)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진정되면서, 소비자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임금 역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의 수준은 불만족스럽다. OECD의 보고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진정되면서, 2022년 대폭 감소했던 실질임금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OECD 국가들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그림 2]에 나오는 35개국 중 16개국에서 2024년 1분기 실질 임금이 여전히 2019년 4분기 수준보다 낮다는 것이 확인된다.

국내의 경우 실질임금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는 높으며,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모습일 뿐, 높아진 물가로 인한 노동자·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향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22년에 물가 폭등에 기여했던 에너지 등을 통틀어 공급 측 요인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공급측 요인에 있었다는 점은 최근에도 확인되고 있다. Brookings에서 최근 발표된 글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주로 공급 충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설명한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그리고 이에 따라 생산비가 증가했고, 기업들의 마진 상승 등과 같이 공급측 요인이 인플레이션에 기인했다는 것이다.<sup>1)</sup> 그래서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것은 이러한 공급측 요인의 해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 국내의 경우를 보자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근원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농수산물식품의 물가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령 2023년 하반기 이후에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또한 생산자 기준 농산물가격 상승률이 20%대 후반으로 급등하기도 해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장민 외, 2024) 게다가 전기 등 에너지 요금도 한국전력을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상황과 얽혀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급측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과 맞물려 상당히 증폭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올해의 폭염과 같은 이상기상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축산식품과 에너지 등 필수적 재화의 적정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불

1) Robin Brooks, Peter R. Orszag, and William E. Murdock III(2024) 참고. 이 글은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지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공급충격에서 찾고,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서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긴축 정책이 과도할 수 있었으며, 향후 마진이 정상화되면 추가적인 물가 안정이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평등이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동자·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임은 당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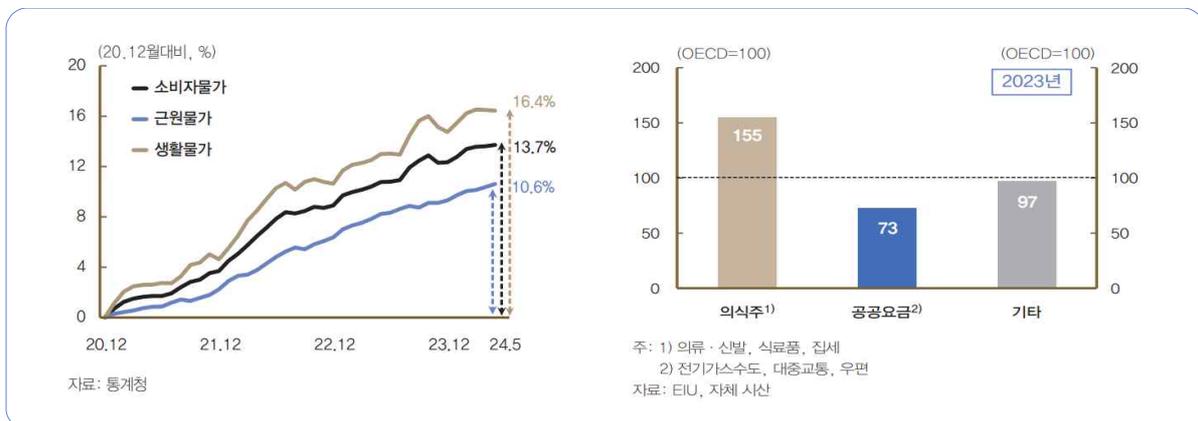
이에 이 글은 인플레이션 위기를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고물가 상황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상황을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던 인플레이션의 원인인 공급측 요인 및 기후위기 등과 관련하여 향후 고물가의 지속 여부에 대해 진단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노동자·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2. 고물가 시대의 현황

### 1)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가?

2023년 이후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둔화했다. 하지만 [그림 3(좌)]에서 나타나듯이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상승률은 14%에 달한다. 또한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 역시 그 누적 상승률은 16%를 넘어섰다. 따라서 물가 수준 자체가 매우 높아져서, 이제는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부담이 더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식주에 해당되는 품목은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편이라, 노동자·서민들의 생활 부담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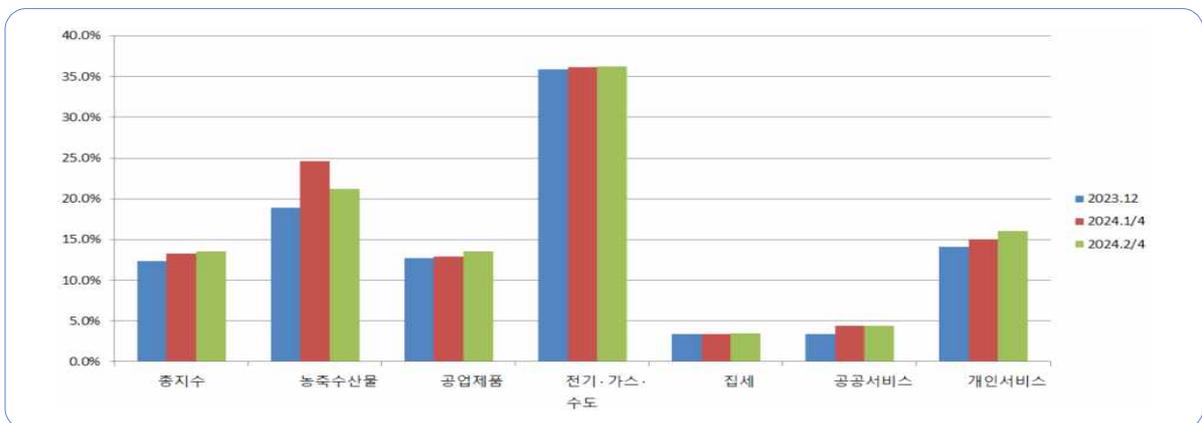
[그림 3] 팬데믹 이후 누적 물가상승률(좌) / OECD 평균 대비 품목군별 가격수준(우)



- 자료 : 임웅지 외(2024)

필수 소비재와 관련하여 품목별 물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는 [그림 3(좌)]와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부터 각 시점(2023년 12월, 2024년 1분기 및 2분기)까지의 (누적)물가상승률을 나타낸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와 농축수산물의 물가가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전기·가스·수도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격이 약 36%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요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2024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이 나타난다.

[그림 4] 품목별 (누적) 소비자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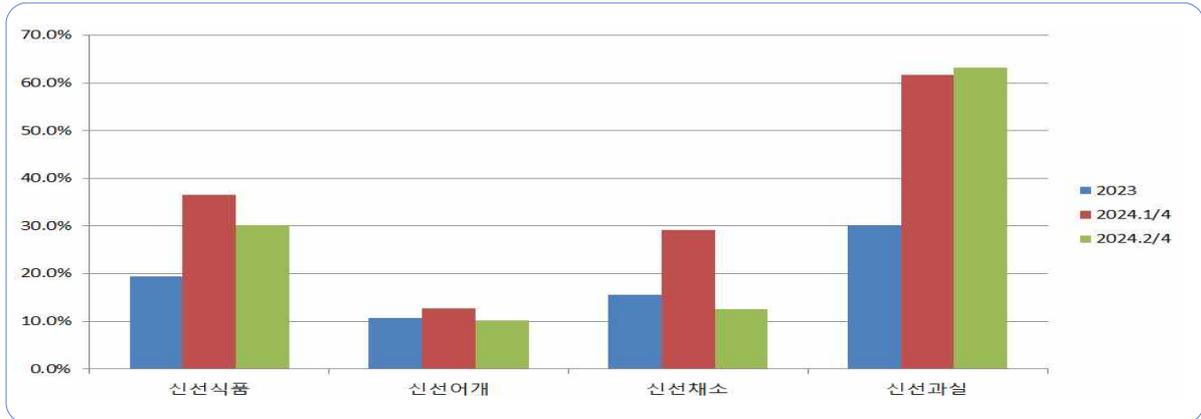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주: 2020년 12월 기준으로 각 시점별 누적 물가상승률

전기·가스·수도 다음으로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농축수산물이다. 농축수산물은 2020년(12월)에 비해 2023년(12월)에는 18.9% 상승했다. 그런데 2024년 1분기에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23년도 1분기에 농축수산물의 전년 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은 1.5%였지만, 1년 뒤 24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에는 축산물, 수산물보다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크게 기여했는데, 농산물의 경우 24년도 1분기에는 전년대비 18.9% 상승했고, 2020년에 비해서는 약 35%의 상승을 나타냈다.

특히 과일, 채소 등의 상품들의 가격이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2020년에 비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파악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이 포함된 신선식품에 해당하는 품목별로 누적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그림 5]와 같다. 신선식품 전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0% 올랐고, 그 중에서 신선과실은 가장 크게 올라 약 3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4년 1분기에는 신선식품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과실 다음으로 많이 오른 신선채소 역시 24년 1분기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5] 신선식품 (누적)물가상승률



- 자료 : 통계청 신선식품지수
- 주: 2020년 기준으로 각 시점별 누적 물가상승률

요약하면, 인플레이션 위기를 거치면서, 필수적인 의식주를 영위하는데 들어가는 농축수산물 및 에너지 관련 품목의 물가가 상당히 상승한 상황이다. 그러한 물가 상승이 노동자·서민들의 생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 2) 물가상승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소득 상승이 뒷받침된다면, 물가상승의 부담은 상쇄되거나 부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실질소득의 변화이다. 그러나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을 뿐이다. 그리고 소득 격차를 고려하면, 저소득 가구일수록 상황은 더욱 안 좋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식료품이나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sup>2)</sup>, 여기에 속하는 품목의 가격 상승은 가구의 지출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 가계동향조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의 비중을 소득 분위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24년 1분기의 경우 60.3%였다.<sup>3)</sup>

이에 이 절에서는 높은 물가수준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를 참고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던 농축수산물과 에너지와 같이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품목이 포함된 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지출 부담을 계산한 것이 [표 1]이다. 이는 각 항목의 지출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준 것으로

2)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20.6%), 주거·수도·광열(19.1%), 보건(13.4%) 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았다. 반면 5분위 가구는 음식·숙박(15.8%), 교통(15.2%), 식료품·비주류음료(11.5%) 순으로 나타났다.

3) 팬데믹 시기 중 2023년 1분기의 적자가구 비중은 62.3%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의 비중을 나타낸다. 처분가능소득은 매 분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의 증대는 지출에 포함되는 품목의 소비량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것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요약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처분가능소득에서 각 품목에 대한 지출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와 근로자외 가구를 비교하면, 후자의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할 수 있다.

첫째, 연료비 지출 부담은 2020년보다 23년(1분기) 및 24년(1분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분위별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 1분위의 경우 23년(1분기) 및 24년(1분기)에 소득 대비 약 8%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동절기 시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상황 및 수차례의 요금인상을 반영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출 증대(혹은 지출 부담)가 추운 날씨를 대비할 정도로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보장했는지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 가구보다 근로자외가구의 지출 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 분위에서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표 1]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비중

연료비	2020.1/4		2023.1/4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전체평균	2.9%	4.8%	3.3%	5.9%
1분위	5.9%	26.2%	8.1%	34.0%
2분위	3.4%	6.6%	5.6%	13.7%
3분위	3.4%	6.6%	4.4%	8.5%
4분위	2.9%	4.4%	3.8%	6.1%
5분위	1.8%	2.6%	2.1%	3.1%
	2024.1/4		2024.2/4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전체평균	3.3%	5.6%	2.0%	2.8%
1분위	8.2%	26.2%	4.4%	12.6%
2분위	5.1%	12.9%	3.1%	6.5%
3분위	4.3%	8.4%	2.7%	4.0%
4분위	3.6%	5.8%	2.2%	3.1%
5분위	2.1%	3.0%	1.3%	1.6%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둘째,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경우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이 항목에 포함되는 품목들은 농축수산품을 비롯해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계산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을 짐작할 수준일 뿐이다. 일단 지출 비중을 보면 2020년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20년에도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지출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24년도 2분기에는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출 비중의 소득분위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근로자보다 근로자외 가구의 지출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처분가능소득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중

식료품 · 비주류음료	2020.1/4		2023.1/4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전체평균	9.1%	12.8%	8.1%	12.8%
1분위	15.5%	60.1%	14.0%	54.6%
2분위	11.1%	24.9%	10.1%	24.5%
3분위	10.8%	17.1%	9.7%	16.3%
4분위	9.6%	12.2%	8.5%	12.1%
5분위	6.6%	7.7%	5.7%	7.5%
	2024.1/4		2024.2/4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전체평균	8.6%	13.3%	8.7%	12.0%
1분위	16.0%	46.4%	14.8%	39.7%
2분위	10.3%	23.9%	9.5%	22.2%
3분위	9.5%	17.1%	9.5%	14.5%
4분위	9.0%	12.9%	9.3%	11.7%
5분위	6.1%	7.9%	6.6%	7.2%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높아진 물가수준으로 인해 생계에 필수적인 품목의 지출이 상승했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높은 지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향후 물가 안정 노력이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이러한 불평등 상황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3. 향후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들

고물가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소비자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이다. 즉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의 감소하고 소비 여력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했듯이, 필수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심각한 지출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이 더해진다면 가계가 직면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물가 안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플레이션 위기를 낳은 공급측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에너지, 농산물, 기후위기가 중첩되어 필수적 재화의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1) 전기 및 난방요금의 인상

전기, 가스(난방) 등 에너지 요금은 2022년 크게 인상되었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동결되어 현재는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 두 요금은 정부와 지자체 규제를 받고 있고 물가 관리 차원에서 쉽게 인상하려고 하지 않지만, 향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올해 7월에 주택용 및 일반용 가스 요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향후 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우선 요금 상승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직접적인 이슈는 지난 인플레이션 위기동안 누적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지고 있는 적자 문제이다. 즉 이들은 이 시기동안 원가 이하로 전기와 가스를 판매했기 때문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본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요금 인상 근거는 OECD 평균보다 공공요금 수준이 낮다기 때문에, 우리가 싼 값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요금 인상을 방치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세대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임웅지 외, 2024)

여기에서 이러한 요금 인상 근거에 대해 지면의 한계상 일일이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의 적자는 인플레이션의 위기때의 물가 부담을 어느정도 완충해주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매요금의 통제는 다양한 형태로 유럽 등의 국가들에서도 이루어졌다. 즉 비상시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공기업의 역할이 낳은 부득이한 결과를 요금인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

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이러한 적자 문제는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내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4)</sup> 아무튼 원가주의에 기초한 요금인상론이 득세하고, 생계문제에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기초가 계속되는 한 요금인상의 가능성은 높을 것 같다.

국외적으로는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가격의 향후 변동 여부이다. 인플레이션 위기 시기에 에너지 위기의 주된 원인이었던 천연가스 가격 폭등은 현재 많이 하락하여 특별히 문제를 낳을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을 낳았던 지정학적 요인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의 조기 중단 우려 및 우크라이나 가스 저장시설 관련 리스크 등으로 공급 불안이 불거지면서 가격이 상승하였다.<sup>5)</sup> 유럽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등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이 경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상을 통해 들어오는 LNG(액화천연가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도입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가령 이번 동절기에 난방 수요가 매우 높아진다면, 이에 더해 지정학적 상황이 악화된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물론 가스 공급이나 다른 대체 자원의 개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난방 요금 상승을 압박할 것이며, 전기 요금 역시 상승 압박을 다시금 받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올해 여름처럼 장기간의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처럼 예년과는 다른 더위 혹은 추위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 한, 요금인상 압력을 계속될 것이며,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불평등해질 것이다.

## 2) 농산물 가격과 기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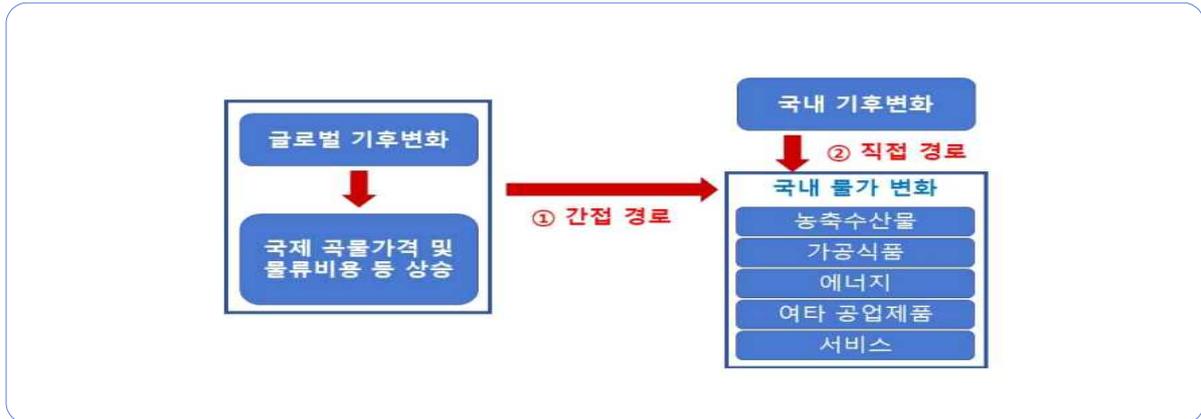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농산물 가격 폭등과 관련하여 기후위기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경로와 간접경로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sup>6)</sup> 여기에서 간접경로는 지구 온난화 등 글로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변동이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말하며, 직접경로는 국내 기후변화가 국내 농산물 생산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말한다.

4) 이와 관련해서는 구준모(2023)을 참고할 것

5)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2024. 9) 참고

6) 이하 조병수 외(2024) 참고

[그림 6] 기후위기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조병수, 민초희(2024)

우선 직접경로의 영향을 살펴보자. 연구에 따르면, 일시적 기온상승은 소비자물가의 상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즉 이상고온이나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도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을 상승시키는데, 가령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날 경우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은 대략 0.3%p,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06%p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과일, 채소 등 농산물가격에 대해서는, 폭염 등 일시적인 기온상승 충격(1℃) 발생 시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최대 0.4-0.5%p 높아진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증장기적인 온난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기온이 1℃ 상승하면 1년 후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농산물 등 비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0.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즉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폭염이나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농산물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과 더불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경로의 영향은 이미 눈앞에 나타나 있다. 2024년 1분기에 급격하게 상승한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 작황 부진에 따른 저장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지영 외, 2024). 신지영 외(2024)에 따르면, 작황 부진 등의 원인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이상 기후 등의 변동성 확대, 재배면적 감소 등의 리스크를 꼽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리, 집중호우 등 기상 재해로 농산물 생산이 둔화하고 재배면적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올해도 이상고온 등 예년과는 다른 기후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공급 및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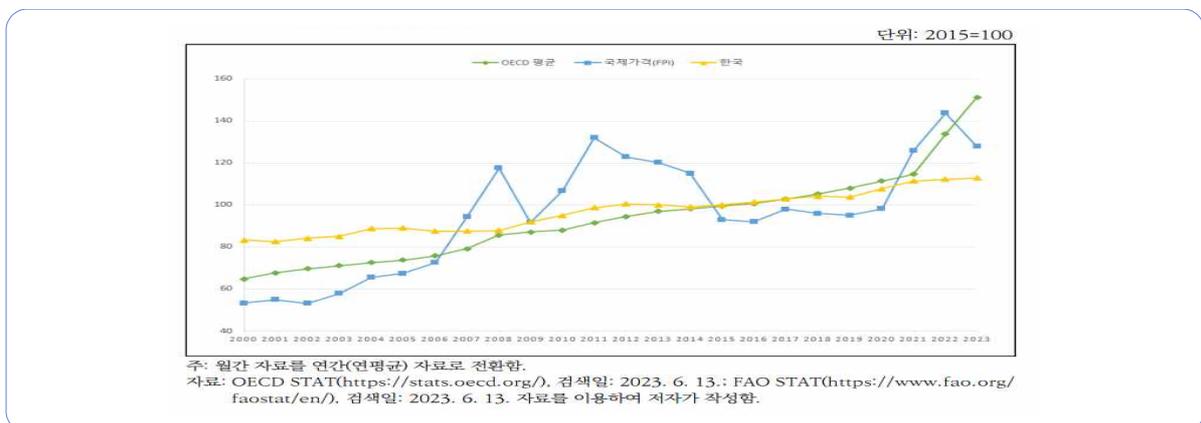
농업 생산에 대한 기후위기의 영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밀은 봄철 기온이 27.8℃를 넘으면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

7) 이하 <https://www.ft.com/content/125e89c0-308a-492f-ae8e-6834847d1186> 참고

국과 미국의 주요 밀 재배 지역에서 이를 훨씬 초과하는 기온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981년에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폭염은 현재 미국 중서부에서는 6년마다, 중국 북동부에서는 16년마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쌀, 대두, 옥수수, 감자는 수확량이 급감할 수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가뭄, 홍수, 폭풍 등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극한 기상 현상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파키스탄에서는 홍수로 인해 논밭이 황폐화되었고, 기후 변화로 인해 작년에 다시 나타난 엘니뇨 해수 온도 현상의 영향이 더해져 설탕, 커피, 코코아의 수확량이 감소했다. 이러한 수확량 감소는 결국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후위기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세계적이라면, 국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직접경로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경우, 기후위기로 인해 생산지에서 흉작 등이 발생할 경우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수급처가 없다면, 적정량의 수입도 불가능해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다. IMF는 전 세계 평균적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1% 상승하면 국내 물가가 약 0.3% 상승한다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다(Weber 외, 2024).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그림 7]은 201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내외 농식품 물가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OECD평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가격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변동성은 훨씬 높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21년 이후로는 국제가격과 OECD 평균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국제 농식품 물가 추이 비교



- 자료 : 김종진 외(2023)

그렇다면 국내 농산물 물가 결정 요인에 수입 농산물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김종진 외(2023)의 연구에 따르면, 첫째,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농식품 물가는 타 품목 물가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상승률도 높았다. 둘째, 무엇보다도 수입 농식품 물가 변동성이 큰데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농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재 물가도 동 기간 유사한 모습으로 급변동하였다. 셋째, 국제 농식품 물가 상승의 국내 영향 정도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급등의 원인으로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제 농식품 가격의 급등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넷째, 농식품 가격의 원가에서 비료, 에너지 등 비농식품 요소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 비료 역시도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로 대외적 변수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산물 생산구조에서 대외적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기후위기로 인해 국제 농산물 가격이 변동할 경우, 간접경로를 통해 그것이 국내에 농산물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향후 에너지 요금 인상 및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정책의 개입이 부재한 채 현상유지를 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물가의 부담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 정책 대안 모색

지금까지 에너지 요금과 농축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노동자·서민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두 가지는 인플레이션 위기를 일으켰던 요인이므로, 향후 상승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에너지와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압력은 향후에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몇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 결론을 대신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인 소득 및 물가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인상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충분한 생계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시적일지라도 필수적 소비재에 대한 가격 관리(혹은 통제)도 필요하고, 수급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둘째, 농산물이나 에너지 등과 관련해서 ‘완충재고(buffer stock)’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베버(Weber, I. 외 2024)는 인플레이션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공공적 완충재고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다. 베버에 따르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적 완충재고는 국제, 지역, 국가 차원에서 가격과 수량 변동을 완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수품의 가격 변동을 줄이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억제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공공적 완충 재고를 통해 “주요 식량의 물리적 가용성을 확보하면, 소규모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러한 재고를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도 일부 농산물이나 에너지 자원에 대해 시행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위기의 교훈으로서 ‘가격’뿐만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수량’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기존 시행 정책을 검토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기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개혁으로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나원준, 2024). 정부 정책이나 최근 한국은행 발표 보고서<sup>8)</sup>에서도 농산물 가격 대책으로서 농산물의 수입 다변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농정은 해외 곡물 메이저의 시장 지배력에 국민먹거리와 국내경제를 고스란히 노출시키므로 물가불안 요인을 장기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으며”(나원준, 2024), 기후위기의 전 세계적 영향을 고려할 경우 매우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영화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개혁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석탄이나 가스발전과 달리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시장의 수익성 논리에 휘둘리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 구조를 공공적인 성격의 구조로 개혁해야 하며,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정부의 재정 투자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8) 임웅지 외 (2024) 참고

## 참고문헌

- 구준모(2023) 전기·가스요금 폭등의 구조 진단과 대안: 기후정의와 에너지 공공성의 관점,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 김종진, 홍연아, 주준형, 박서윤(2023)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985
- 나원준(2024) 윤석열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4-02
- 임용지 외 (2024)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24-14호
- 조병수, 민초희(2024)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BOK 이슈노트, 제2024-18호
- 신지영, 노시연(2024) 경계와 대응이 필요한 물가 차별화 지속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4년 2/4분기
- OECD(2024)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4
- Robin Brooks, Peter R. Orszag, and William E. Murdock III(2024) COVID-19 inflation was a supply shock, BROOKINGS COMMENTARY
- <https://www.brookings.edu/articles/covid-19-inflation-was-a-supply-shock/>
- Weber, I., Schulken, M, Bassermann, L., Luig, L., Urhahn, J.(2024) Buffer Stocks against Inflation:How public food stocks can stabilize prices and help to transform our food systems, Policy Papers, Heinrich-Böll-Stiftung, Rosa-Luxemburg-Stiftung, TMG Research